

농민단체 등 전국적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운동

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, 정부기관 18개 청(산림청, 해양경찰청, 농촌진흥청 등)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. 인수위원회는 이 안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1월 28일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추진 중에 있다.

그 동안 농업계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업·농촌회생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기술지도 기능을 갖고 있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어려운 농업·농촌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농촌진흥청이 민영화되면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돈이 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, 농촌지도기능이 폐지되어 농민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축소 또는 폐지되어 농업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. 더 나아가 현재 중소농에 있는 농가들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.

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은데 대해 본 협회를 비롯한 농업계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대여론을 펼치고 있다. 또한 새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판단아래 반대서명운동과 현수막설치 등 범 촛불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.

이미 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임원, 각 시·도 지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서명운동, 현수막설치 등을 하달한 바 있으며, 회원여러분께서도 각 시·도지회와 각 시·군·구 분회를 주축으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.